

## 주간동향 [2006. 9.7~9.13]

강민정

 본원 전문연구원  
 02-3156-7137  
 kwdi\_trends@kwdi.re.kr

-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국가인권위원회, KTX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 권고
-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프로그램 사업계획 확정
- ❖ 통계청, 20대 여성 취업자 급감
- ❖ 여성가족부,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선정
-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새로운 이혼담론 만들기 토론회 개최

###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가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주고, 자녀를 입양할 때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9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우리사회의 출산율이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의 출산과 관련된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는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입양·유산 휴가제를 도입해 산모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90일 기간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배분하도록 했다. 또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은 30일, 22주 이상은 60일, 28주 이상은 9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2주간의 휴가를 부여하여 입양자녀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해 연가일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국가인권위원회, KTX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11일 여성만 KTX 승무원으로 분리채용하고 위탁

고용으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하므로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원회는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장이 지난 3월 철도공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KTX 승무원의 업무상 성별이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고객 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반복 업무로 보고 여성만 분리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KTX 승무원을 위탁 고용해 일반 열차 승무원보다 임금과 승진, 상여금, 인센티브, 휴식시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성의 경우 단기간·저임금의 고용조건을 제공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차별행위로 정리했다. 아울러 KTX 승무원 채용기준을 21~25세, 키 162cm 이상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용모의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하다는 입증이 없기 때문에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인권위 권고는 진정이 제기된 2004년부터 2005년 5월까지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2005년 6월 승무 업무를 위탁받은 (주)KTX관광레저는 인권위에서 지적한 고용구조의 성차별적 요소 등을 모두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철도공사는 "KTX관광레저는 이미 고용조건에서 남녀구분과 연령제한을 폐지했고 승무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프로그램 사업계획 확정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3일 전문 여성과학기술인과의 연계체제(Mentoring)를 통해 우수 여학생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확대를 추진하는 특별 프로그램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200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2006년 9월 현재 전국에 지역별 10개의 WISE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별로 1.5억~3억원이 차등 지원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WISE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WISE 프로그램이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확대 및 인식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WISE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89%가 '새롭고 유익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86.4%의 학생들이 'WISE 프로그램에 다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과학과목에의 흥미 상승이나 과학직업에 대한 지식 확보 등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WISE 프로그램이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출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WISE 센터에서는 국내 우수 여성과학자를 책임자로 선정, 여학생들이 과학기술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중이다. 특히 WISE센터에서 중점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사업"은 현재까지 1,000여명이 넘는 여성과학자들이 멘토로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공계 대학 진학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e-멘토링 제도"를 실시해 많은 여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WISE 지역 센터별 프로그램 차별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과평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WISE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통계청, 20대 여성 취업자 급감

통계청이 9월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316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인 31만8천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4월 30만7천명을 기록한 이후 5월 28만6천명, 6월 25만5천명, 7월 26만3천명 등 3개월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다 4개월 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20대 취업자는 12만명 줄어들어 8월 현재 20대 전체 실업률은 7.4%로, 여전히 전체 실업률(3.4%)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 취업자 수는 20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1만6천명(5.3%)이나 감소했다.

20대 여성 취업자 수의 급감은 여성 일자리 비중이 높은 소매업 부문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소매업 분야에서만 일자리 11만1천개가 사라졌으며, 도소매업 부문에서 줄어든 20대 여성 취업자 수만 6만3천명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편의점, 할인점, 백화점 뿐 아니라 일반 상점들도 모두 포함되는 소매업 부문에서 20대 여성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던 20대 남성들 가운데 일부가 20대 여성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던 소매업 일자리에 취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대 여성의 일자리가 12만개 가까이 사라지는 동안 20대 남성의 일자리는 불과 4천개(0.2%)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 그러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 ❖ 여성가족부,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선정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3일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대상으로는 대도시 지역에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도시 지역에 경기도 평택시, 농어촌 지역에 전라남도 해남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시범지역 선정은 시범사업 공모기간 중 응모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지역균형성, 사업기반,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의 참여의지, 재원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2008년 본격도입 예정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고,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육아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기본보조금 제도는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적정보육비용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성된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는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향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중 기본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5세의 아동에게 4만 2천원을 10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은 보육료 인하, 교사보수 인상, 아동 급·간식 개선 등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게 된다. 기본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보다 높은 보육료 상한액이 적용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자율징수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새로운 이혼담론 만들기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9월 12일 종로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새로운 이혼담론 만들기 제1차 토론회 '한국사회의 이혼, 과연 문제인가?'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민법개정안을 통해 법제화가 예고된 이혼숙려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혼숙려제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제도이다. 논의의 중심이 된 민법 개정안은 협의 이혼 제도가 혼인의 신속한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혼인 중 부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인섭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이혼숙려제를 도입할 경우 이혼 과정이 장기화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기간 동안 이혼 당사자들이 장기간의 이혼 소송 혹은 협의 이혼 과정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권정순 변호사는 이은영, 유승희, 안홍준 의원안과 이달 하순 제출 예정인 법무부안을 비교 분석했다. 권정순 변호사는 각 법안들이 협의이혼절차의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이혼율 감소'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혼과 관련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수용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에도 과도한 침해가 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현철 이화여대 법철학과 교수 역시 이혼숙려제도는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대해 국가가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성적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체계의 근본 전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